

“도지사 선거, 국정과 함께”

민주안호영 의원, “국가 전략 속 전북의 위상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 “차기 정당대회 염두에 둔 경쟁으로 변질돼”... 정책 중심 경쟁 촉구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6일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전북의 미래를 설계할 도지사를 뽑는 선거”라며 네거티브 중당과 정책 중심 경쟁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6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중심 경쟁을 촉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가 전략 속에서 전북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라며 “에너지 대전환과 AI·반도체 산업의 지방 확장이라는 국정 방향 속에서 전북이 중심으로 도약할지, 주변으로 밀려날지는 이번 선거에 달려 있다”고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이번 도지사 선거는 대통령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전북의 기회로 연결할 수 있는 인물을 선별하는 과정”이라며 “그러나 최근 선거가 차기 정당대회를 염두에 둔 정치적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번 선거는 전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어야 다른 정치적 목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선택이 정치적 계산에 좌우되는 순간 전북의 미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김관영 지사와 정책적 연속성을 바탕으로 팀을 이뤄 전북 발전을 이끌겠다”며 “성과는 계속하고 한계는 보완해 전북의

과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과 관련된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관영 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책 연속성과 도민 통합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 만큼 정책 경쟁을 통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치러져야 한다”며 “네거티브 선거를 중당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만호기자 · 진안=우태만기자

“전북의 위기, 도민과 하나돼 돌파”

민주 이원택 의원 통합 · 도민주권 강조



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민주권 전북”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는 “도민을 도정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세우고 도민의 뜻이 도정의 방향이 되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도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의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과 “도민주권”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지금 전북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경제 위축과 대외 환경 불안까지 겹치며 도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하나됨”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갈등과 분열로는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집단지성과 이를 아우르는 통합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도지사실을 찾아 김관영 도지사의 문봉투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정내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전주 위기 극복 위해 민생 밀착형 정책 공조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협력 의지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국주영은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주의 재정 위기와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중심 정책을 논의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시민 대상 강의와 컨설팅을 병행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인사는 지난 4일 국 후보 사무실에서 만나 지역 인사들과 함께 장시간 심도 있는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는 단순한 정치적 연대를 넘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성 있는 정책 발굴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전주의 미래 성장 전략으로 ‘석화촌’ 조성 방안이 제시됐다. 임 전 군수는 은퇴한 대학교수, 고위 공직자 기업 임원 등 국가급 전문가를 전주로 유치해 정책 자문과 도시 발전 전략을 담당하는 지식 거점을 만들고 제안했고, 국 후보는 이를 수용했다. 석화촌은 도시 비전 수립뿐 아니라

나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방안도 논의됐다.

창년층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두 인사는 일자리·주거·육아·교육이 한 공간에서 해결되는 ‘청년 특화 산업단지’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지역 개발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청년 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 정부 여건 개선책도 제시했다.

전주시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양측은 “1조 원 예산 확대가 결국 1조 원 규모의 부채로 이어졌다”고 진단하며, 차기 시정에서는 부채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필수 민생 정책은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임 전 군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고, 국 후보는 “정책의 효율성과 시민주권을 공약에 적극 반영해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기자

“완주희망 정책연대 결성... 결선 진출자 단일 지지”

이돈승·서남용·임상규 민주 완주군수 예비후보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경선에 나선 이돈승·서남용·임상규 예비후보가 완주희망 정책연대를 결성하고 결선 투표 시 단일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과 경쟁 후보를 겨냥했다.

세 후보는 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을 넘어 완주의 미래를 살리기 위한 책임 있는 정치 실천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무너져 가는 완주를 바로 세우야 할 공동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며 “완주는 지금 선택의 기로가 아니라 벼랑 끝에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완주의 존립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군민이 반대하는 통합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유희태 예비후보를 향해 “책임 시절에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다가 사퇴 이후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과거와 현재의 입장 변화에 대해 군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이들은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라 군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원칙”

이라며 “현재는 반대 여론이 높은 만큼 이를 존중해 막아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후보는 위기 대응 리더십 부재와 그동안의 군정 운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유희태 예비후보를 둘러싼 부동산 거래 의혹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세 후보는 이번 정책연대의 핵심으로 경선 이후 단일화를 제시했다. 이들은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결선에 오를 후보를 조건 없이 지지하겠다”며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완주의 미래 정책은 공동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희태 후보 측은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으며, 언론 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과 함께 맞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사안은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만호기자 · 완주=염재복기자

“국가 치유농업 메카 도약 기대” | 전북 치유농업단체, 이원택 의원 지지 선언

전북 치유농업협회(회장 이정하) 소속 전북 치유농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지자 10여명이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이원택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전북 치유농업협회 소속 전북 치유농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지자 10여명이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이원택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휴을 만지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해왔다”며 “농업은 단순한 먹거리 생산을 넘어 현대인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생명 산업이자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원택 후보는 “전북을 대한민국 치유농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먼저 김해 치유농업센터를 모델로 한 ‘점박형 치유농업 컨트롤타워’ 구축을 요구했다.

이원택 후보는 “전북을 대한민국 치유농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에 공감한다”며 “이원택 후보와 함께 그 담대한 여정에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기자

연구·교육·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합 운영하는 거점 기관을 통해 전북 치유농업의 전국 표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도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바람 치유 비유체’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

립에 노출된 도민들이 부담 없이 치유농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치유농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 확대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 기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 식물 상자 보급 사업과 은퇴자 정착을 연계한 치유농업 활성화 정책도 제시했다. 특히 은퇴자들이 전북 농촌에 정착해 치유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농촌 소멸 문제를 완화하고, ‘기본 사회’ 실현의 기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소상공 회생 등 공약 발표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의 회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이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지원과 책임을 함께하는 상생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위기 극복 △인프라 구축 △혁신성장 △기회 확대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전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을 대폭 확대한다.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 공공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핵심이다.

혁신성장 전략으로는 업종별 맞춤형 브랜딩과 마케팅 지원을 추진한다. 기회 확대 분야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의 제도전을 지원한다. /이만호기자